다산포럼

민주주의, 토론을 통한 선거로

임현진
서울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올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 이후 민주주의와 영욕을 같이하면서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네 단계로 선관위가 조직되어 오늘에 이르러 있다. 그러나 4·19 혁명을 가져온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보듯 선거관리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고, 1963년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아왔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선거가 개화하기 위해선 토론이 필수적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선 후보자들 사이의 연설과 토론을 통해 자질과 공약을 검증한다. 유권자들은 정당의 당원이라기보다 후보자의 지지자로서 자발적으로 봉사한다. 우리와 달리 지구당 없이 선거가 가능한 이유다. 지지자들의 자원봉사로 인해 선거자금도 줄어든다.

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났듯, 세 후보자들 사이의 토론과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지지율이 1% 미만이라도 국회의원 5인 이상 의석을 갖는 정당의 후보는 세 차례에 걸친 대선후보자 토론회 참가자격을 지닌다.

문제는 이정희 후보가 제3차 토론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사퇴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토론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선거방송 토론의 의미는 살아나지 못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형식적 균형 논리에 맞추다 보니 거꾸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국회 원내의석을 확보한 정당에 자격을 주는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토론 참여자의 난립, 기계적 토론방식, 유력 후보자의 불참, 유권자의 참여 제한 등을 막을 방도가 없다.

여러 정당의 참여를 다양성이라는 미명 아래 보장하다 보니 주요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이 경시되고 있다. 선거방송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규에 대한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

양당제도를 갖는 미국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5%를 얻은 후보나 결선투표제를 실행하는 프랑스처럼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에게 참여 자격을 주는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가 제안한 대로 1차 토론은 기존 방식대로 하되, 2차 토론은 지지율 10% 이상 얻은 후보자만 참여하고, 그리고 3차 토론에는 최다 지지를 받은 2인에게 토론 기회를 주는 방식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현재 토론방식은 후보자들에게 반론과 재반론을 개진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자에게 시간 통제 이상의 권한을 주지 않음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열띤 논쟁을 유도하기 어렵다. 사회자가 필요할 경우 개입하여 후보자들의 후속적인 답변을 통해 토론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후보자들이 주제를 벗어나 색깔논쟁이나 인식공격 등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는 것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4년마다 이뤄지는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과 달리 매해 이뤄지는 정당정책 토론에는 유력 정당의 대표나 위원장이 불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대 당에서 누가 출현하는가에 따라 참가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서로 위상과 자격이 일치하지 않아 토론이 겉도는 사태가 발생하곤 한다. 정강·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규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997년 대선후보자 토론에 TV토론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토론회는 최소 3회로 명문화되어 있고, 언론기관 초청 토론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 16대 27회, 17회 11회 개최되었으나 18회에는 TV토론이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토론과 박근혜 후보의 단독 토론이 있었을 뿐이다.

TV토론은 성격상 주제보다 이미지가 강조된다. 유권자들이 이미지 효과에 빠져 자질과 공약 검증에 소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 패널을 통해 후보자를 상세히 검증할 수 있는 타운홀 방식의 토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선에서 종종 사용하는 타운홀 토론은 일정한 수효의 패널이 직접 후보자들에게 질문하면서 이것을 유권자들이 TV로 지켜보도록 해 품성, 자격, 정책, 비전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해 준다. 앞으로 비단 대선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타운홀 토론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양동옥의 S 스토리

성희롱, 친밀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부서 회식을 하는데 주물럭이 나와서 음식을 옆으로 넘기며 "여기 주물럭이요." 하자 상사가 "주물럭은 그게 아니고 이게 주물럭이지!"라며 음흉한 눈빛으로 직원의 옆구리와 손을 주무른다. "퇴근 후 네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자고 나서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어?" 사장이 직원에게 밤늦게 수차례 전화를 해댄다. "당신은 여자인데 얼굴이 너무 크고 못생겼어, 그리고 뚱뚱해. 내가 뚱뚱하다고 해서 목매달지는 마, 목매달래도 밧줄이 두꺼워야 해!" 많은 사람 앞에서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비웃듯 말한다.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판결을 받은 사례 일부분이다.

이런 언동을 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친밀감을 표현하려고 장난이나 농담을 했다고 말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성적 모욕감을 심하게 느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을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고 한다. 성희롱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더불어 직장 장면에서 비일비재했던 일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5년 전부터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소송 사건은 1993년 10월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의 교수와 조교 사이에서 발생했다. 교수가 실험실 기기 조작법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조교의 신체를 만지거나 몸매를 감상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그 행동에 거부 의사를 밝힌 조교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5년여 동안의 법정공방 끝에 조교의 일부 승소로 성희롱이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직장 내에서 남녀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됐던 신체 접촉이나 성적 농담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되자, 그동안 '여성은 직장의 꽃, 남성의 보조자'라는 남성 중심적 사고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이제 3不 時代가 왔다!'고 성희롱 판결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여성이 다가오면 쳐다보지도 말고, 말도 걸지도 말고, 스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괜히 트집 잡히면 억울하게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뜻이었다.

성희롱은 성폭력의 한 종류로 여성을 동등한 능력의 직장 동료나 인격체가 아닌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차별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성희롱을 문제 삼는 것은 융통성이 없어서 사회생활이나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까다롭게 구는 행동이라며 오히려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최초의 성희롱 판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을 규정짓고 있다.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적 언동은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이며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도 포함된다.

언어적 성희롱의 사례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그리고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것과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그리고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성희롱의 행위자들은 상대방을 즐겁게 하려고 농담을 했다거나 상대방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려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변명한다. 말 또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성적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삐뚤어진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성희롱은 직장 내 상하관계 즉 직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조직의 남녀 비율, 나이에 따라서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적 괴롭힘을 거부하면 업무 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성희롱 피해자들은 움츠러든다. 결국, 피해자들의 업무 효율성은 저하되며 성희롱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조직의 이미지 또한 실추된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외쳐보자. '성희롱! 말하기 전에, 쳐다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5초만 생각하면 예방할 수 있다.'

기고

시야를 밖으로, 무대가 넓은 외국으로 진출하자

윤인후
광양시 부시장

몇 년 전 후방부대 군인을 면회하고 돌아오면서 군 단위 지방도로지만 너무나 시원하게 뚫려 혼자 가기 미안할 정도인데 오면서도 다른 차는 못 보았다.

아마 바로 옆에 국도가 지나간 때문 아닌가 싶었다. 지금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마을 길도 다 잘 돼 있는 편이다. 아직도 더 많이 개선해야 할 곳이 있지만 이제는 중복투자이고 공급과잉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는 1962년 수출 1억불을 달성한 지 49년 만에 1조불을 달성, 2011년 세계 9위, 지난해 8위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수출의존도 분석자료에 의하면 GDP대비 60%인데 점점 더 높아져 간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려면 내수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가 2.3%이어서 실업률 저하나 고용확대는 어려울 것이다. 자원 빈국으로 불가피하게 수출을 확대해야 하고 그 대안은 수출전략을 내실화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 달러를 넘기고도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 가보면 물건들이 즐비한데 계절이 지나면 그 많은 상품은 어떻게 처리할까 의문이 생긴다. 결국 포화상태인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의 건설업체 949곳 가운데 424곳 조사결과 4곳 중 1곳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지역 납품 업체 간 종류나 제품이 유사해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어서 더 이상 진출할 만한 분야가 없어 차라리 외국으로 진출하라고 권하고 싶다.

한 기업체 대표는 먹고 살만한데 외국 나가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일할 근로자 공급, 근로자 숙소, 출퇴근 버스노선 문제 등을 지자체에서 해결해 줄 것을 주장한다. 과연,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 갈 방안은 있는가.

우선,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자금, 인력, 유통, 마케팅, 홍보 등의 애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중소기업청 등 기관이 나서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애로사항 청취로 적극 해결하고 점검한다. 중소기업→대기업으로 육성해 가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그리고 군소 기업들을 규모화하거나 강소기업 또는 스타기업으로 파이를 키우도록 하고 내수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해가면서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유도한다. 그렇게 하면 기업체 하나를 더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

수출도 연도별, 국가별 목표설정과 직원 담당제 지정, 신시장 개척, 새로운 품목 개발 등 매년, 장기 수출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지속 점검해야 한다. 광양시의 기업체(지난해 말 현재)는 422개에 1만6000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 중 수출은 33개로서 7.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2011년에 비해 2.8%가 증가했으나, 올해는 1.7%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대부분 미·중·일에 치우치고 제철, 제강, 전기, 기계 등 특수 업종에 한정돼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다.

동남아의 신개발국으로 떠오른 MVIP(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와 남미·아프리카·유럽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매실, 파프리카, 애호박, 감 등 농산품도 2차 가공품 등으로 다양하게 신 수출품목을 개발하고 있다. 항만공사, KOTRA, 중소기업청, 중진공, 무역협회, 세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수출지원 컨설팅, 해외동향파악을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 기업,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 한다. 즉, 우리 지역 안에서만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활동무대가 더 넓은 세계를 무대로 삼아야 한다. 매년 열리던 매화축제를 지난해부터 국제매화문화축제로 격상하고 외국대사 초청, 자매도시 합동공연 및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했다. 10개국 참석 대사 부부, 외국인, 시민의 호응이 좋았고, 파나마 대사관은 광양사무소를 개설해 광양만권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성과를 얻었다.

수출로, 투자유치로, 관광수입으로 연결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의 힘을 더욱 강하게 길러 눈을 동네, 지역에서 나라 밖으로 돌려 해외로 진출해 나가자.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社 說

대국민 사과 이어 靑 난맥상 바로 잡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장·차관 낙마사태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일은 있으나 국민을 상대로 한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는 국민과 나라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일"이라며 "어떠한 사유와 진술에 관계없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사실 관계가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정상 외교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취임 77일 만에 대통령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박 대통령이 대(對)국민 사과까지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그 스스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데 있다.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씨를 '1호 인사'로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한 게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날 사과 발표에는 '불통인사'에 대한 사과 내지, 인사시스템 개선 등은 언급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 공직기강 해이에서부터 늑장 보고, 허위 브리핑, 책임 떠넘기기, 위기관리 미숙 등 심각한 난맥상을 보였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단지 사과를 했다고 두루뭉술 넘어가기에는 사태가 너무 엄중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자기만의 '인사 스타일'을 고집할 게 아니라 대대적인 인사 쇄신책과 여론 중심의 새로운 인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의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 등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태의 정확한 실체 파악을 통해 범죄인 도피 의혹 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잇따른 산업현장 인명사고 이대로 안된다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잇따른 안전사고로 근로자들의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 업체의 안전의식 결여와 당국의 무관심이 화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목포의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45m 높이의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도 안전불감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늦어진 공사기간에 노후된 장비로 휴일작업을 강행하다가 발생했다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타워 크레인 상부와 하단에 이어주는 섬유소재의 슬링벨트 등이 낡아 끊어진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

지난 10일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전로(轉爐) 보수공사를 벌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 누출로 숨졌다. 희생자들은 산소마스크와 경보기 등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업체의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안전시스템에 있다.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10명에 달해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도 저장탑 내부의 잔류 가스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안전사고는 기업과 당국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상존할 수밖에 없다. 갑의 입장에서 하청업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으니 안전은 뒷전인 셈이다. 정부는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돈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도 이젠 '안전이 곧 이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기업체와 당국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언제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無 等 鼓

제스처와 문화

영국 동물학자인 데즈먼드 모리스 박사는 인간을 '생물학 법칙의 지배를 받는 동물'로 간주하고 오랫동안 인간행동을 연구한 결과를 모아 '맨워칭'(Man watching) 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신호를 보내는 갖가지 동작'을 말하는 제스처 등 시대와 나라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많은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 들려준다.

간단한 손동작도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 이를테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드는 제스처의 경우 미국에서는 '완벽함'(perfect)을 나타내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돈, 프랑스에서는 '별 볼일 없음', 몰타섬에서는 '남성의 동성연애'(男色)를 의미하는 등 다의적(多義的)이다. 영국에서 검지와 중지로 V사인을 할 때 상대에게 손바닥을 보이느냐, 손등을 보이느냐에 따라 승리, 또는 경멸의 상반된 의미로 읽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저자는 무의식적, 계획적인 학습을 통해 행해지는 행동 외에 외설 제스처와 옷차림 신호, 금기영역 등 인간의 은밀한 성적 행동에도 돋보기를 들이댄다. 특히 악수와 포옹, 팔짱끼기 등 신체접촉 결합 사인을 설명하면서 "어른의 머리나 엉덩이, 허벅다리,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은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이거나 또는 성적인 것, 그 둘 중의 하나이다"고 강조한다.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미국에서 꼭 성공하라고 말한 게 전부"라며 "미국의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럼에도 일관된 거짓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긴 실수라는 그의 자의적 해석은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다운 뻔뻔함은 차후 팩트(Fact)를 통해 검증이 되겠지만 이번 성추행 스캔들을 보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燁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